

다문화가족 통합지원사업 추진

박노동 _ 대전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2007년 기준으로 국제결혼을 통하여 국내에 이주해 온 여성 이민자가 11만 명을 넘어섰다. 전체 혼인자 8쌍 중 1쌍이 국제결혼으로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있다. 이러한 추세라면 10년 후 외국인 비율이 전체 인구의 5%에 이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결혼이민자 가정의 경우 2명 이상의 자녀를 가진 세대 비중이 높아 다문화 가정의 구성비율도 높아지리라 본다. 대전광역시도 예외가 아니어서 결혼이주여성이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 2007년에 2,500명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우리 사회에 새로운 규범과 질서를 요구하는 동시에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야 할 사회문제이자 정책적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교육인적자원부, 농림부, 행정안전부, 여성부 등 여러 부처에서 갖가지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국제결혼으로 국내에 이주해 온 여성 이민자의 국내 정착과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해 왔다. 2006년 4월에 여성결혼이민자들이 결혼과정에서 겪게 되는 제 문제 및 이들의 사회적 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에서는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주관으로 범정부차원의 총괄추진체계를 마련하고, 2006년 4월 종합지원대책을 수립하여 발표한바 있으며, 여러 부처에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의 지원정책은 사안해결의 단기적 처방에 급급하여 급조된 정책을 산발적으로 추진하면서 사업의 비효율성, 중복성, 일회성 사업에의 반복 투자 등 정책추진과정상 문제점이 노출되기도 하였다.

대전광역시 또한 관련 사업들에 지원을 하고 있었으나 중앙정부와 마찬가지로 지난 2-3년 간 비체계적으로 사업이 정해지고 지원되면서 중복지원 및 비포괄적이라는 지적이 있었으며, 이에 대한 새로운 방향의 개선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광범위하게 제기되어 왔다.

2008년은 이러한 초기 사업의 문제점에 대한 문제를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는

전환기로 볼 수 있다. 2008년에 대전광역시에는 그동안 산만하게 추진되어온 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통합지원시스템을 마련함으로써 결혼이민자를 포함한 다문화가족 전체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 주고자 관련 사업을 계획·추진 중에 있다. 2008년 대전시 건강가정 시행계획에 나타난 바에 따르면, 6대 핵심 영역 52개 추진과제 중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사업은 4대 영역에 걸쳐 21개 과제에 이르고 있다. 2008년 3월 말 현재 추진 중이거나 추진예정인 관련 사업들은 과거와 달리 체계적이고 단계적이며 종합적인 추진방식을 지향하고 있다. 우선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부터 다문화가족의 아동양육지원사업에 이르기까지 결혼이민자 여성 당사자뿐만 아니라 자녀의 양육까지 세대를 통괄한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결혼이주여성의 건강, 교육, 법률, 인권, 경제활동, 문화활동 등 생활상의 모든 문제를 포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추진 중에 있다. 특히 이러한 정책의 지속성과 활성화를 위한 실태 및 욕구조사를 수행하여 다음 정책에 반영할 예정으로, 과학적인 사업 발굴 및 추진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대전발전연구원이 주관하는 대전가족공동체포럼의 주제를 결혼이민자 지원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발굴에 두고 매달 개최함으로써 지역 정책 전문가 네트워크를 활용한 다양한 정책들을 수립 중에 있다. 전체 21개 과제를 총괄하여 조정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들도 동시에 추진함으로써 전체 대전시민이 다문화의 가치를 공유하고 함께 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고 있다. 향후 결혼이민자의 안정적 체류와 적응을 위한 포괄적 지원서비스 제공이 보다 실질적인 성과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현재 추진 중인 각종 사업의 지속성이 전제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대전시민 모두가 여성결혼이민자 본국의 언어·문화·관습에 대한 교육에 참여하여 상호 적용할 수 있는 내향적 국제화 프로그램이 동시에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